
「2020-2호 (2020.5월)」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0. 4. 22.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P)	• 2020년 4월 최근 경제동향 • 2020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2020년 1분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현대경제연구원
2. 재정 (2~3P)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 •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국가회계 재정통계) • OECD 지방재정 관련 주요 통계와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3. 예산·재정 관련법령 (4~5P)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 인지세법 일부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6~9P)	•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이슈 대응 및 규제개선 연구 •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환시장 현황 및 시사점 •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전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살린다 •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대책 현황과 과제 •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10~12P)	•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3월 노동시장 동향 •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OECD 1위” 전망 •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위해 중앙·지방 역량 결집한다 • 코로나19로 GVC 재편 본격화...보호무역·블록화 움직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무역협회

01	경제	출처
	■ 2020년 4월 최근 경제동향 - 2월 산업활동은 전월 대비 생산·지출 측면의 주요 지표 모두 감소 - 3월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19.5만명 ↓, 실업자 1.7만명 ↓, 비경제활동인구 51.6만명 ↑, 고용률 0.8%p ↓, 실업률 0.1%p ↓ - 물가는 3개월 연속 1%대 상승(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 확대를 석유류 가격 상승세 둔화로 상쇄) - 국내 금융시장은 3월 중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환율은 소폭 상승, 국고채 금리는 단기물 하락, 장기물 상승 등 만기별 혼조세 시현 -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고용지표가 크게 둔화되고 수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 어려움 확대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2020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 올해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 '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20.1월 전망 대비 △6.3%p) - 한국(IMF분류상 선진국)의 경우 올해 -1.2%('20.1월 대비 △3.4%p) 성장 전망, 이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2020년 1분기) - (개요)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진국의 산업생산 및 세계 교역 감소세로 침체 단계 진입 - (주요국 경기 상황)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주요국 경기 동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소비·수출 감소 등 침체 확산 - (최근 글로벌경제 주요 이슈)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충격과 소비절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 위기, 주요 안전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사태 장기화 시 신흥국 자본유출 등 피해 불가피 - (시사점)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필요 ① 경제 여건 및 파급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실물 경기로의 전이 방지 노력 필요 ② 금융시장 불안의 국내 전이 방지를 위한 수출 금융 강화,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 ③ 글로벌 유동성의 모니터링 강화, 국제 공조체제 강화 ④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확대 지원책, 연구·개발의 질적 업그레이드, 한류 이용 융복합 상품서비스 개발 노력 필요 바로가기	현대경제연구원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

KDB미래전략연구소

-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 마련, 국가별 다소 상이
 - ① 미국: 2조달러 긴급 예산안 및 국가 비상상태 선포로 재난자금 편성
→ 개인소득 보조 및 실업수당 인상, 조세·의료지원 등
 - ② 영국: 1,045조원 규모, 대량실업 방지 중점 지원
 - ③ 프랑스: 466조원 규모, 피해 자영업자 소득보전 및 실업수당 인상 등에 중점 지원
 - ④ 독일: 1,002조원 규모,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출·보증 위주 지원, 필요 시 정부가 해당 기업을 인수하여 기술 유출 방지

[바로가기](#)

■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개요) 정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발표('20.3.30.)
 - * 지급대상: '20.3월 건보료 합산액 소득하위 70% 가구
 - * 지급액: 가구원수별 차등지급(40만원~100만원)
 - * 재원규모(재원): 9.1조원(중앙 7.1조원, 지방 2조원)
- (주요국 사례) 주요국 현금지원 정책

구 분	주요 내용
미국	- 연소득 7.5만(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 개인1인당 1,200달러 - 만17세 이하 자녀 1인당 500달러 추가
일본	- 소득 급감 가구, 30만엔 -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1만엔 추가
독일	-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 3개월 운영비
프랑스	- 전년도 매출 100만유로 이하인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 중 영업중지 또는 전년대비 매출액 50%이상 감소한 경우, 1,500유로
홍콩	- 전체 영주권자(개인), 1만홍콩달러
싱가포르	- 전국민(개인), 소득에 따라 100~300싱가포르달러 - 자녀양육자, 50세이상 고령자,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

-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례) 우리나라 17개 광역 및 45개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명칭,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규모, 신청 및 지급방법, 소요재원 충당방식 다양 → '20.4.7.기준 지자체별 추진현황, 재원충당, 규모 등을 수록
- (쟁점 및 정책적 함의) 지급대상 등[전국민 지급 '보편지원방식', 일부 국민 지급 '선별지원방식(소득기준 또는 피해기준)'] 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지방재정 매칭으로 인한 쟁점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 병행 필요
- (결언)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필요 → 지급기준 결정 시 신속지급 가능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전망

[바로가기](#)

■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국가회계 재정통계)

* ‘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에 대한 분석보고서(기획재정부 발표)

- 2018회계연도 재정수지는 59조원 흑자, 총자산 및 부채는 각각 3,603조원, 761조원으로 순자산은 2,842조원
- 재정수지 5개년 추세를 보면,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 규모는 완만하게 감소, 중앙정부의 법인세 12.9조원 및 소득세 10.1조원 증가, 지방정부의 지방소득세 2.1조원 증가 등 국세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개선
- 자산·부채의 5개년 추세를 보면, 금융자산은 부채조달 및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로 증가, 부채는 차입 및 평가 등으로 증가, 비금융자산(건물 및 구조물, 토지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은 감소 추세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 요구됨
- 국제 비교(OECD 평균) 시, 총수입은 33.5%로 OECD평균 37.3%에 비해 낮은 편, 조세부담률은 17~20%로 OECD평균 24.9%에 비해 낮은 편, 총지출은 30.4%로 OECD평균 40.2%에 비해 낮은 편, 재정수지는 3.1% 흑자로 OECD평균 △2.9%에 비해 매우 양호

[!\[\]\(0aff635c4179ba9e710b00f4b01d3b20_img.jpg\)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ECD 지방재정 관련 주요 통계와 시사점

- (개요) 1991~2017년까지 36개 OECD 회원국의 지방재정 관련 주요 통계를 정리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를 유지, 국가간 지방세 비중의 격차는 매우 큰 편으로, 대체로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이 높고 단일국가의 지방세 비중이 낮음
- (지방세 비중) 한국의 지방세 비중(17.27%)은 OECD 회원국 평균(전체 14.69%, 단일국가 11.24%) 대비 높지만 연방 평균(24.97%) 보다는 낮음
- (재정분권 현황) OECD 회원국의 재정분권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분권 보다 세출분권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세입을 확보하는 권한보다 자율적으로 지출하는 권한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음. 한국의 세입분권 및 세출분권 비중(20.85%, 34.35%)은 OECD 회원국의 전체 평균(19.72%, 31.29%)을 상회하고 있음
- (과세자주권 현황) OECD에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을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국보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과세자주권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가 꽤 있다는 점을 볼 때, 향후 한국에서는 과세자주권 수준을 높이는 질적인 측면의 재정분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bb0e4f14c4133b37d2887cb37e67ddd_img.jpg\)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0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시행 '20.3.31.)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 바로가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개정·시행 '20.4.1.) -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 세입징수자가 수입원의 직무를, 지출명령자가 지출원의 직무를 각각 겸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업무 절차 간소화 바로가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개정 '20.3.31. 시행 '20.4.1.) - 과세형평, 조세제도 합리화,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폐지 - 인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범위 축소(권면금액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부과하던 인지세를 5만원 초과 상품권에 부과,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 취소로 전액 환불, 폐기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바로가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0.1.7. 시행 '20.4.8.)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을 규정, 그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 -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에 재난유형별 위기 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관리 실태 포함 -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공동주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시설 확대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0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시행 '20.4.14.) - 코로나19 피해부문의 긴급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임대인과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요건을 정함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함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 추가 <u>바로가기</u>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개정·시행 '20.4.21.) - 코로나19 피해부문의 긴급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 방법과 공장의 연면적 등의 범위를 정함 <u>바로가기</u>	법제처 법제처

■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이슈 대응 및 규제개선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배경) 디지털 네트워크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시장이 형성되고, 플랫폼 경제 확산은 해당산업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기존사업과의 충돌·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미비한 시스템 문제 발생
- (연구내용) 공유 플랫폼에 대한 국·내외 현황 분석, 중기·소상공인 관점에서 이슈 분석, 신사업자와 기존사업자의 이해충돌 및 공유경제 규제 현황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정책적 대안 제시
- (정책적 시사점)
 - ①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 분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
 - ② 국가차원의 공유경제 전략 수립 및 전담 조직 구축
 - ③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고려
 - * 각 노동자: 카카오톡, 우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노동자
 - ④ 정확한 산업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공유경제 산업 실태조사 실시, 데이터 분석 및 관리 필요

[!\[\]\(fa6f3af6bfa46c5d4a2d362681095beb_img.jpg\) 바로가기](#)

■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목적)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 파악,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
- (문제점) 기금사업 용도의 불명확성, 성과분석 대상의 적합성 부족, 자체 성과분석의 실효성 미흡,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기능 결여 등의 문제점 도출
- (개선과제) 기금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용도 지정, 성과분석 대상의 제한,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지침 제공,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기능 강화
- (연구의 한계)
 - ① 교육,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분야 사업은 체계성을 결여한 채 단속적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하다고 전제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검증 필요
 - ② 지역상생발전기금이 해당 지역의 경제력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다루지 않음
 - ③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본 연구는 2018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결과에 기초)으로, 향후 실제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보완 필요

[!\[\]\(e1c624d4757f08486e89482c18364c17_img.jpg\) 바로가기](#)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환시장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 (현황) 원/달러 환율은 WHO가 ‘범세계적 유행병(팬데믹)’을 선언한 3월 11일 이후 급등세,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의 통화가치는 동기간 절하세, 3월 19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인 1,285.7원 기록, 3월 31일 및 4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한·미 통화스왑자금이 시중에 제공되면서 국내 외환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감. 4월 9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19원으로 연중 최고치 대비 약 5% 하락한 수준 기록
- (외환수급 불안요인) ① 코로나19로 3월 중 글로벌 안전자산 및 유동성 확보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여건 크게 악화 ② 대고객(소매)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회수 및 국내증권사의 해외ELS 관련 증거금 수요 증가
- (향후 전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최근 외환부문의 충격은 금융부문의 불균형에서 촉발되었던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당분간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① 미연준의 역외 달러공급의 속도 및 역량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위기의 확산이 제한적일 것임
 - ② 우리나라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이 매우 건실하다는 측면임
 - ③ 외화유동성 위기 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막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크게 개선됨
- (시사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흥국의 위기발발 가능성과 국내 외환시장 수급상황 및 글로벌 달러화 자금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외화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바로가기](#)

■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들어가며)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마련 중임
- (경제적 충격) 공급·수요·금융의 모든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1.5%에 그치며 심각한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대책법을 통과시켜 총 2조 1,083억 달러(2,570조원)의 경기부양책 마련,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 각국도 경기부양책을 마련, EU는 개정준칙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여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사점)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과정에서 미국 및 유럽국가들과 같은 강제적인 이동제한 조치가 없어 실물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타 국의 실물경제 위기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바로가기](#)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전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살린다

- 코로나19로 수요 및 공급 모든 측면에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구매의 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 비대면·지역 대상·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현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전자화폐 발행이 제안될 수 있음
- 정부는 지난 3월 8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현재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를 위해 2,400억원을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20.3.6. 기준 총 19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음(미발행 45개)
-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감염병 전파 억제하면서 지역특산품을 소비하기 위한 매체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류 형태가 아닌 전자상품권으로의 발행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현재 전국 기준 10.1% 정도가 모바일 사용 가능한 상황, 강원도의 경우 지류 11개 시군, 카드 1개군)
- 관련 플랫폼 구축, 배달협업체 구성, 가맹점 확대, 지역 외 거주민에 사용 홍보, IT환경 소외계층 접근성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전자상품권 확대 발행로 중소기업인 및 영세상인의 생산물 소비 촉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류 및 카드발행 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할 수 있을 것임

[!\[\]\(4cafc60cd39da821525d7c6589540296_img.jpg\)바로가기](#)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대책 현황과 과제

- (들어가며)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급식 중단으로 판로를 찾지 못하는 학교급식 산업체의 피해 발생됨
- (학교급식 관련 산업 현황) 학교급식은 1일 총 20,809개교, 약 613여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 개학 연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급식 산업분야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업, 급식 식재료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생산 농가, 각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임
- (정부 대책)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업분야 피해대책(3.5. 1차, 3.17. 2차, 3.23. 3차)은 피해농가 용자 지원,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는 꾸러미 판매, 공동구매 등 대체판로 확보 지원, 그 외 소비지 대형마트·생협·공영홈쇼핑 등 각 업체들은 친환경농산물 특별 할인행사 온·오프라인 실시 등임
- (향후 과제)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피해 범위와 규모를 산정하여 추경예산에 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단기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농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 수립,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한 대체 판로 확보, 재난상황 장기화 및 학교급식 중단 대비 대응시스템 마련

[!\[\]\(8a8ea273bba45b658cf4779d37ab61e8_img.jpg\)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목적) 일본의 신기본법 농정을 대상으로 정책의 결정 방법과 예산확보 방법 등의 실태를 정리, 이를 근거로 한국의 새로운 정책 제언 제시
- (연구내용) 신기본법 농정의 분권화 전개와 과제, 정책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국가와 지방의 재정시스템 구조, 농림수산업의 축소와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응(농림수산업은 보조금 사업의 축소와 개편, 정책평가제도를 통한 예산 조정으로 대응)
- (특징과 시사점)
 - ① 일본 농정은 국제화 대응, 지방분권 개혁의 압력, 농림수산업의 제약 등의 흐름을 타고 정책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개혁은 계속되고 있음
 - ② 국가의 일반회계는 증가하나 중앙정부의 농림수산업예산은 감소 추세로 예산 제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됨
 - ③ 지역활성화를 비롯한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방집권의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 자체가 정책 입안의 장이 되어 지역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적 체질로의 변화 필요

[!\[\]\(30072721fe92392a2d7c953be68f714a_img.jpg\)바로가기](#)

■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국토연구원

- (주요내용)
 - ①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하락하다 '12~'16년까지 상승기를 거쳐 '17~'19년 조정기를 겪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주택시장의 국면이 변화될 가능성 있음
 - ② 주요국 부동산 조세는 거래 단계별로 취득단계-취득세·등록세, 보유단계-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세 등, 매매단계-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각각 부과
- (정책방안)
 - ① 부동산 조세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각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② 영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대응
 - * (미국) 임대소득세 엄격히 부과, (싱가포르) 취득세 세율 상승 (프랑스) 보유세가 높은 편, 부동산부유세 부과
 - ③ 투기억제라는 명확한 정책목표 아래,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조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꾸준한 추진 필요

[!\[\]\(67b99c4d964e257c5482ff1b2462b204_img.jpg\)바로가기](#)

■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3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

- '20.3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76명, 전년동월 대비 25만 3천명 증가
-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숙박음식, 보건복지, 교육, 도소매 등), 제조업(자동차, 전자통신, 금속가공 등)과 여성, 60세이상, 청년 중심으로 증가폭 둔화 및 감소
- 사업장은 모든 규모에서 증가폭 둔화, 특히 1~4인,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둔화
- 3월 증가 폭 둔화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수 증가(+2만4천명, +3.4%)보다 취득자수 감소(-10만 8천명, -13.5%)가 주된 원인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5만 6천명,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 8천명, 지급건수 1회당 수혜금액 133만원, 주로 보건복지업·제조업·건설업·도소매·교육서비스 등에서 신청

[바로가기](#)

■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4.8.)

기획재정부

-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실물 피해대책, 10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에 이어 18조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대응 중
-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아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확정

구 분	규 모	내 용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기재부)	17.7조원 +@	① 공공부문 3.3조원+@ 규모 - 최종구매자 역할 강화 2.1조원 - 건설투자 조기집행 1.2조원 - 국가계약제도 절차 대폭 완화 ② 민간부문 14.4조원+@ 규모 - 착한소비 확산 -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세 부담 추가 경감 12.4조원 - 취약차주 재기지원 2조원 등
수출활력 제고 방안(산업부)	38조원 +@	① 수출애로 해소 - 36조원 이상 무역금융 추가 공급 - 비대면 수출 적극 지원 - 인적이동·물류애로 해소 -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한국산 진단키트 등) ② 글로벌공급망(GVC) 안정화 - 공급망 재편: 338개 품목으로 확대 ③ 기업 R&D 부담 경감 등 2조원 이상
스타트업·벤처 기업 지원방안 (중기부)	2.2조원 +@	① 스타트업 전용자금 추가공급 1.1조원 ② 벤처투자 1.1조원 투자 유발

[바로가기](#)

■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4.22.)

기획재정부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발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추가 대책 발표

구 분	부 처	내 용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고용부	① 고용안정 특별대책 총 286만면, 10.1조원 -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지원 - 긴급 일자리 창출(공공, 청년) - 실업자 지원 확대
	금융위	① 기업안정화 지원 75조원+@ 규모 - 기간산업 일자리 지원 40조원 → 기금 신설, 국가보증채권 발행 * 7대 기간산업(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② 금융안정프로그램 추가 확대 35조원 * 당초 100조원+@ → 135조원+@ 규모 -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 추진 - 코로나 피해대응 P-CBO 공급 5조원 확대 -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관계부처 합동	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전환·가동(경제 중대본) * (기존) 1단계 비상대응조치 → (전환) 상시위기 관리·대응 위한 2단계 대응체제 * 본부장: 경제부총리, 주1회(목요일) 정례 개최 -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 - 발표된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수립 ② 4~5월중 고용·수출대책, 기업대책 추진 ③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정

-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예정

[!\[\]\(99af31d6d7b9b738106c66bf7ffde536_img.jpg\)바로가기](#)

■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OECD 1위” 전망

기획재정부

-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2%, 36개 회원국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 OECD 회원국 중 성장률 전망이 가장 높고 하향 조정폭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
-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
- 올해는 코로나19로 대규모 봉쇄조치에 따라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5.8%로 전망, 한국도 기존 2.7%에서 0.7%p 개선된 3.4% 성장률 전망

[!\[\]\(1a2e9c86c2a63dd0890db1012b677415_img.jpg\)바로가기](#)

■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위해 중앙·지방 역량 결집한다

행정안전부

-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국가 추경안 국회 의결 시 자치단체도 즉시 추경 실시, 신속집행 추진 위한 사항을 사전 준비키로 행안부·기재부·복지부·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 논의(4.17.)
- 정부는 일부 자치단체의 자체 ‘생계비 지원’ 사업과의 연계방안과 관련해 중첩·보완지급 등에 대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탄력적 조정하도록 안내

[!\[\]\(bf201d91b9b614baaf9dc5168bdd7cec_img.jpg\)바로가기](#)

■ 코로나19로 GVC 재편 본격화 ... 보호무역·블록화 움직임

한국무역협회

- 코로나19 이후 산업계에서 일어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글로벌 밸류 체인(GVC, 세계공급망) 재편’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코로나19 위기를 타고 본격화 조짐
- 미국은 ‘국방물자생산법’(기업에 의료 물자 증산 강제, 연방 정부가 의료 물자의 가격과 공급을 관리)을 발동하고, ‘바이 아메리카’(의료 물자 조달 시 미국산 제품 우대) 발동도 고려 중임
- 이에 맞서, 중국·일본·독일도 자국의 실정에 맞는 GVC 블록화를 추진하며 재편 움직임을 보임
- 한국도 미국 주도의 GVC 재편에 따른 여파를 예의주시하며, 우선 수출 기업에 36조원 이상 금융을 지원하고, 화물 노선을 증편하는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에 나섬

[!\[\]\(d4a6cd25494365257969801de384a807_img.jpg\)바로가기](#)